

## 평창 동계올림픽과 한국 스포츠 외교: 방향성의 모색을 위한 제언

정기웅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한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함으로써 국제적인 4대 스포츠 행사를 모두 유치한 국가가 되었다. 동계올림픽이 흔히 선진국들의 잔치라고 불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국가브랜드의 상승효과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는 오래도록 탈 정치성을 표방해 왔지만 정치적·외교적 도구로 사용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세계화에서 타국 국민들에게 자국의 국가이미지를 개선시키고, 호의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데 있어 스포츠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 스포츠의 정치적·외교적 사용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들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입의 적정 수준과 합리적 개입 방식을 모색하는 데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스포츠의 정치적·외교적 도구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 스포츠 외교의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 스포츠 외교가 향후 추구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행하고 있다.

제언으로서 한국 스포츠 외교는 한국 공공외교와의 수렴을 모색해야 하며, 평창의 드림 프로그램은 그 좋은 실례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 스포츠 외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스포츠 외교 전문기구의 수립과 스포츠 외교 관련 업무의 통합 및 단일화, 메가 스포츠 이벤트 유치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정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 목 차

1. 들어가는 말
  - 가.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
  - 나. 아시아의 올림픽 유치 경험과 그 의미
  - 다. 서울 올림픽과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한국의 스포츠 외교
2. 스포츠의 정치적 도구성에 대한 몇 가지 시각
  - 가. 스포츠에 대한 두 개의 일반 이론
  - 나. 국가우위론
  - 다. 스포츠 국제기구 우위론
  - 라. 초국적 자본 우위론
3. 외교적 도구로서의 스포츠와 스포츠 외교
  - 가. 스포츠의 외교적 상징성
  - 나. 스포츠의 외교적 사용 방식
  - 다. 국제적 스포츠 행사가 외교적 제재 혹은 관계회복의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들
4. 한국 스포츠 외교의 현황
  - 가. 한국 스포츠 외교 조직
  - 나. 한국 스포츠 외교 인력 강화방안
  - 다. 국제체육기구 임원 진출
5. 한국 스포츠 외교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 가. 한국 스포츠 외교와 공공외교의 수렴
  - 나. 공공외교 + 스포츠 외교 = 태권도?
  - 다. 평창의 드림 프로그램
  - 라. 정책적 제언
6. 나가는 말

## 1. 들어가는 말

### 가.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

- 2011년 7월 6일(이하 한국시간) 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제123차 국제 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 총회에서 평창은 독일 뮌헨(Munich)과 프랑스 안시(Annecy)를 제치고 2018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음. 평창은 투표에 참가한 95명 IOC 위원의 과반수인 63표를 득표하여 1차 투표에서 승리를 결정지었음.
- 대한민국은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이어 2018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게 됨으로써 국제적인 4대 스포츠 행사를 모두 유치한 국가가 됐음. 이러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뿐임.
- 동계올림픽이 흔히 선진국들의 잔치라고 불린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및 국가브랜드의 상승효과와 더불어 선진국 진입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임.<sup>1)</sup>

### 나. 아시아의 올림픽 유치 경험과 그 의미

- 지금까지 아시아에서는 세 번의 올림픽과 한 번의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음. 이들 올림픽은 한국·중국·일본 세 국가와 올림픽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1964년 도쿄 올림픽: 전후 세계의 일본이 패전을 딛고 경제대국으로 다시 우뚝 섰음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함.
  - 1988년 서울 올림픽: 냉전의 종식을 촉진시키고 방송과 결합된 스포츠가 얼마만큼이나 강력한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를 부각시킴. 또한 스포츠와 결합한 상업주의의 강력한 영향력을 각인시킴.
  -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 일본이 오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 강국임을 과시하는 동시에 21세기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음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역할을 함.
  -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냉전 후 세계질서의 구축 과정에서 새로운

강대국 등장의 신호탄으로 작동함과 동시에 세계화된 세상에서 스포츠와 결합한 민족주의가 어떠한 변화의 궤적을 따를 것인지를 관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sup>2)</sup>

- 역대 올림픽 경기에 대한 평가에 있어 아시아에서 열린 올림픽 경기들은 각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매우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어짐.<sup>3)</sup>

#### 다. 서울 올림픽과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한국의 스포츠 외교

- 서울 올림픽은 1970년대 이후 경제적 실패와 테러, 정치적 이유로 인한 보이콧 등으로 쇠퇴의 길에 들어서고 있던 올림픽을 다시 부활시켰음. 한국에게 있어서도 정치적·경제적으로 성공적인 올림픽이었다는 부분에 있어 대부분의 평가가 일치함.<sup>4)</sup>
- 성공적 올림픽 개최의 경험을 가진 한국에게 있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는 각별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온 국민이 성공적 개최에 대한 열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
- 한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아가고 있는 중임. 2010년에는 의장국으로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국가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내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회원국임. 한국은 이와 같은 국제적 역할의 담당이 국격(國格)과 국가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함.
- 스포츠는 오래도록 탈 정치성을 표방해 왔지만 정치적·외교적 도구로서 사용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음. 세계화된 세상에서 타국의 국민들에게 국가이미지를 개선시키고, 호의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데 있어 스포츠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음. 스포츠의 정치적·외교적 사용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들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입의 적정 수준과 합리적 개입 방식을 모색하는 데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임.

*스포츠의 정치적·외교적 사용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이들 간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개입의 적정 수준과 합리적 개입 방식을 모색하는 데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임*

스포츠의 정치적  
 도구성에 대한 접근들은  
 국제무대에서의  
 행위자에 대한 구분,  
 스포츠 활동에 있어  
 국가 영향력의 작동  
 방식, 스포츠의  
 도구성에 대한 구분  
 양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음

-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스포츠의 정치적·외교적 도구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 스포츠 외교의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 스포츠 외교가 향후 추구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행하고자 함.

## 2. 스포츠의 정치적 도구성에 대한 몇 가지 시각

### 가. 스포츠에 대한 두 개의 일반 이론

- 1970년대 사회학자들은 대부분 사회생활에 관한 두 개의 일반 이론(기능주의이론과 갈등이론) 중 하나를 이용해 사회 속에서의 스포츠를 분석했음(Coakley, 안민석 외 편저 2002, 41-72).
  - 기능주의: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전파해서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
  - 갈등이론: 지배-피지배 관계를 은폐하고 고착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의 하나.
- 두 이론 모두 스포츠가 산업사회와 국가의 요구에 맞게 구성되어져 왔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음. 산업사회와 국가의 요구에 맞게 구성되어진 스포츠는 다음과 같음.
  - 정치적인 측면에서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상징조작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정치적 목적에 기여.
  - 대외적으로는 다양한 외교적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 비정치적 형식의 정치적 수단을 제공.
  -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산업사회의 발달한 생산력 수준으로 새로운 자본축적의 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
- 세계화 물결의 범람 이후 스포츠의 위상은 정치적 도구에서 목적 그 자체로 변화하고 있음. 이와 같은 스포츠의 정치적 도구성에 대한 접근들은 국제무대에서의 행위자에 대한 구분, 스포츠 활동에 있어 국가 영향력의 작동 방식, 스포츠의 도구성에 대한 구분 양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음. 본고에서는 스포츠 활동에 있어 행위자의 영향력 정도를 중심으로 크게 국가우위론, 스포츠 국제기구 우위론, 초국적 자본 우위론으로 분류함.<sup>5)</sup>

## 나. 국가우위론

- 스포츠의 정치적 도구성을 설명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임.
- 정준영은 스포츠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일차적 힘을 발휘하는 것은 국가, 대중매체, 상층계급 등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들이 스포츠 활동의 틀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규칙을 제정하며 스포츠의 특정한 의미를 정립하여 확산시킨다고 주장함(정준영 2003).
- 역사적 사건들을 검토해 보았을 때 개발도상국가에서 국가와 정치시스템에 대한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정치지도자에 의해 스포츠가 장려된 많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음. 세계 강대국들과 겨루어 승리한 스포츠의 성공은 애국심을 함양시키고, 다민족 사회에서는 민족을 초월한 통합에도 도움을 줌. 이러한 이유로 아직도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스포츠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조문기 2007, 130-131).
- 스포츠에 있어 국가개입의 유형은 여러 형태로 나타남(Houlihan 2007, 215-218).
  - 근대 초기에 이루어졌던 특정한 스포츠에 대한 통제나 배제를 위한 간섭.
  - 1차 세계대전 직후 보다 유용한 군사적 능력을 갖추기 위한 국민배양의 목적으로 국가에 의해 행해졌던 스포츠 활동의 격려.
  - 스포츠 활동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통합의 촉진.
  - 국민적 일체감의 조성이나 국가건설(nation-building)을 위한 스포츠 활동의 장려.
- 최근의 국가개입은 주로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가우위론 논의들은 스포츠가 국가의 의도에 의해 정치적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스포츠와 정치와의 관계에 있어 국가에 의해 수행되는 정치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지님.

**국가우위론 논의들은 스포츠가 국가의 의도에 의해 정치적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스포츠와 정치와의 관계에 있어 국가에 의해 수행되는 정치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지님**

## 다. 스포츠 국제기구 우위론

- 스포츠 국제기구 우위론은 세계화론과 밀접한 연관을 지님. 세계화는 국제 스포츠 무대에 있어 국가가 갖는 우월적 지위를 약화시킴.

**스포츠 국제기구****우위론은 세계화되는****세상에서 최소한****스포츠 활동에 있어서는****국가의 영향력보다****스포츠 국제기구의****영향력이 더욱 강하게****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을****취하고 있음**

스포츠의 국제체계 내에서 국가들의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훨씬 감소하였으며, 그 결과 스포츠에 있어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상당한 정도로 초국적 기업들과 국제적 스포츠 비정부기구들에 의하여 설정된 의제 내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음(정기웅 2008, 47).

- 스포츠 국제기구 우위론자들은 규모나 조직 면에서 보았을 때 국제 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IOC)와 국제축구연맹(FIFA: 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같은 국제 스포츠 기구들을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 권위를 갖는 ‘국제체제’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함(Bairner 2005, 87-100; 임현진·윤상철 2002, 125-127). 즉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등의 대표적인 국제체제와 같이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임. 이들은 국제 스포츠 기구의 강대화와 이와 결합한 상업자본의 영향력 확대가 스포츠 무대에서 국가의 영향력 작용을 감소시킴으로써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국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각국 정부의 목표를 더욱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함.
- 스포츠 국제기구 우위론은 세계화되는 세상에서 최소한 스포츠 활동에 있어서는 국가의 영향력보다 스포츠 국제기구의 영향력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라. 초국적 자본 우위론**

- 초국적 자본 우위론은 대개 스포츠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접근을 시도하는 학자들에 의해 채택되어짐(김방출·권순용 2007; 이강우·김석기 2006; 정희준 2008). 이 입장에 따르면 국제 스포츠 기구의 강대화를 가져온 세계화와 상업화, 스포츠 경기와 거대자본의 결합은 동시에 이와 같은 국제 스포츠 기구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임. 왜냐하면 이들 또한 조직의 존속과 팽창을 위해서는 거대자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들 기구나 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회장들의 권력이란 스포츠 부문에 한정되어 있는 특수하고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임.
- IOC와 FIFA를 위시한 거대 스포츠 조직들에 의한 스포츠의 상품화

는 정도 이상으로 심화되고 있음. 몇몇 종목의 경우 프로구단들이 국가대표 팀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되었고, 그들 중에서도 자산 규모가 큰 구단들만이 살아남고 있음. 이들은 국가적 경계를 넘어 선수를 확충하고 구단을 운영함으로써 일종의 초국적 기업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됨.

- 메가 스포츠 이벤트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행사규모를 확대하고 관객 수를 늘리고 있으며, 이는 동시에 스포츠 마케팅 분야 다국적 기업들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 자본가의 입장에서 볼 때 국제적 스포츠 행사는 자국 내의 문제 해결을 위해 타국의 자본가들을 압박하는 자본 간의 경쟁이 행해지고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음.
- 갈통(J. Galtung)이 지적하듯이 스포츠는 ‘팽창주의적인 서구중심적 우주론에 전형적인 결합물을 완벽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Galtung 1991, 150), 따라서 후진지역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본들에 대한 세계적 대자본의 지배도 심화될 것임.
- 초국적 자본 우위론은 국제적 스포츠 행사가 갈수록 대자본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더 강한 제약을 받게 될 것임을 시사하며, 이 과정에서 국가 또한 자본의 지배에 휘둘리는 종속적 존재일 뿐인 것으로 간주함. 초국적 자본 우위론은 세계화 된 시장에서 국가와 스포츠를 자본의 도구 및 종속적 존재로서 간주하는 분석 및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음.

*초국적 자본 우위론은 국제적 스포츠 행사가 갈수록 대자본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더 강한 제약을 받게 될 것임을 시사하며, 이 과정에서 국가 또한 자본의 지배에 휘둘리는 종속적 존재일 뿐인 것으로 간주함*

### 3. 외교적 도구로서의 스포츠와 스포츠 외교<sup>6)</sup>

#### 가. 스포츠의 외교적 상징성

- 스포츠는 다양한 외교적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음. 현대사회의 스포츠는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평화, 우애 등과 같은 가치의 추구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 스포츠 대회가 구현하고 있는 상징들은 국기, 국가, 성화, 시상식 등과 같은 국가적 요소들을 포함하여 나타나고 있음(이강우 외 2006, 167-168). 이는 스포츠의 외교적 도구로서의 사용을 촉진시킴.

**외교를 국가목표와 국익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고 정의한다면, 스포츠 외교는 그 하위 개념으로서 외교의 수행에 스포츠를 이용함으로써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선택 및 그 집행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외교를 국가목표와 국익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고 정의한다면, 스포츠 외교는 그 하위 개념으로서 외교의 수행에 스포츠를 이용함으로써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 선택 및 그 집행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임. 말하자면 생존, 번영, 그리고 국가위신 등의 국가 이익을 스포츠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 또 다른 측면에서 구분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교라고 말할 때는 상위정치(high-politics)의 외교를 의미한다면, 스포츠 외교는 저위정치(low-politics)의 외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은 저위정치의 스포츠 외교가 상위정치의 외교와 구분되는 측면으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음(유호근 2008, 66-67).
  - 외교적 기능 수행의 측면: 스포츠 외교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개최, 선수들의 교류, 주요 스포츠 관련 인사들의 방문 등의 기능적 분야에서 수행됨.
  - 시민사회와의 연계성 측면: 상위정치의 외교의 경우, 그 집행의 대상이 최고정책결정자 및 관료집단이라면, 스포츠 외교의 경우 시민사회와의 연계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짐.
  - 행위자의 측면: 스포츠 외교에서는 초국가적 행위자, 비정부 행위자들의 활동이 활발함. IOC와 FIFA 등과 같은 국제 스포츠 기구는 올림픽과 월드컵 등의 개최지 선정, 방송중계권 배분, 공식 스폰서의 선정 등 제반 사항과 관련하여 지배적 힘을 발휘하고 있음.

#### 나. 스포츠의 외교적 사용 방식

- 국가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팔아 자국의 이미지를 고양하는 ‘이미지 확장’의 도구임.
- 자국이 찬성하지 않는 국제적 행위에 대해 특정 경기에의 참여 여부로 의사를 표명함.
- 타국과의 스포츠 경기를 활용함으로써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거나 타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함.<sup>7)</sup>
  - ‘이미지 확장’ 효과는 성공의 문제와 수용의 문제로 대별할 수 있음.
  - 성공의 문제는 경기장에서의 성공과 직결되어 있음. 즉 어떤 경기에서의 우수한 성적 달성을 국가의 우월성과 동일시하는 것임.

- 수용의 문제는 더욱 국제적임. 많은 국가들은 자국이 국제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화하기 위해 스포츠에 의존해 왔으며, 이는 특히 한국, 중국, 독일과 같은 분단된 국가들의 경우에 더욱 명백히 드러남. 1969년에는 오직 13개국만이 동독을 승인했으며, 2000년 올림픽에서는 대만 선수들이 ‘중화공화국-대북’이라는 깃발 아래 행진한 것을 기억해야 함. 1970년대 한국도 북한과의 정통성 다툼에서 유엔에서의 표 대결은 물론 국제스포츠 행사에의 참여를 통해 꾸준히 국가의 정통성을 주장해 왔음.
  - 그 존재 자체가 전혀 의심받지 않는 몇몇 확립된 국가들조차 자신들의 지위를 표명하기 위해 스포츠를 사용한다는 점이 언급되어야 함. 광범하게 주장되어져 온 바와 같이, 올림픽에 대한 중국의 열정은 주로 자국이 국제 체제 내에서 하나의 성숙한 국가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과시하기 위한 열망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짐(Allison 2005, 5-6).
- 국제적 스포츠 행사에서는 특정 국가의 참가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곤 함. 이런 경우 스포츠는 그 본질에 있어 정식외교와 다를 바 없음. 식전 행사에서 볼 수 있는 경기 참가국들의 국호사용, 국기계양과 국가연주, 그리고 경기에서 승리한 팀의 국기계양과 국가연주와 같은 의식(儀式)적 행위들은 매우 훌륭한 도구가 됨. 비록 국제사회에서 배척받는 가장 악랄한 독재정권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경기에 참여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일련의 의식적 과정을 통해 마치 국제적인 승인을 받고 세계무대에서 당당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권인 듯한 환상을 연출해낼 수 있게 됨. 이와 반대로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에 참가를 거부당한 국가의 경우 그 국가는 현실적으로도 외교적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함. 또한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제적 스포츠 행사에서의 특정 국가에 대한 승인의 수준은 일상의 국제정치 영역에서도 선례로 남는 경우가 드물지 않음(양순창 2003, 61).
- 스포츠 보이콧은 각국 정부들에게 다른 정치적 수단들에 대한 저비용의 전략적 대안으로서 매력을 갖는다고 언급되어짐. 예로, 만약 영국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하여 경제나 무역 제재조치들을 가했더라면 이는 영국 노동자들과 자본가들에게 높은 비용을 부과하는 행위였겠지만, 이를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스포츠 접촉으로 대신하였을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자의 경우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스포츠의 외교적 사용  
방식은 국가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팔아 자국의  
이미지를 고양하는  
'이미지 확장'의  
도구로서 타국과의  
스포츠 경기를  
활용함으로써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거나  
타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사용됨*

스포츠가 타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1970년대 초반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졌던  
소위 ‘핑퐁외교’를  
들 수 있을 것임

소소한 것에 그치게 됨(Allison 2005, 6-7).

#### 다. 국제적 스포츠 행사가 외교적 제재 혹은 관계회복의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들

- 국제적 스포츠 행사가 외교적 제재의 수단으로 사용된 사례들은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음.
  -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등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들은 1948년 런던올림픽 참가를 거부당하였음.
  - 네덜란드, 이집트, 이라크, 스페인 등은 영국과 프랑스의 수에즈 침략에 항의하여 1956년 멜버른 올림픽에 불참.
  - 로디지아(지금의 짐바브웨)가 영연방으로부터의 독립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자 영국은 로디지아에서 행해지고 있는 인종차별정책을 이유로 1972년 뮌헨 올림픽에 로디지아가 참가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음.
  - 뉴질랜드는 인종차별정책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스포츠 교류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를 이유로 아프리카의 20개국이 뉴질랜드를 올림픽 위원회에서 축출할 것을 주장하며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참가를 거부함.
  -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미국은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 참가하였던 미국 선수단을 철수시켰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소련과 공산권 국가들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음.
  -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남북한 선수단의 올림픽 개막식 동시 입장함.
  -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티베트 독립운동과 관련해 발생했던 일련의 보이콧 움직임.
- 스포츠가 타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1970년대 초반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졌던 소위 ‘핑퐁외교’를 들 수 있을 것임. 양국은 관계개선을 위한 시도로 스포츠 팀의 교환을 실시했는데 미국은 중국에 탁구팀을, 1년 후 중국은 미국에 농구팀을 보냈음. 종목의 선택이 실로 정치적임. 미국은 당시만 하더라도 탁구에서 강자가 아니었으며, 중국은 농구에서 강자가 아니었음. 미국 탁구팀이 중국과의 경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중국 농구팀이 미국과의 경기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

하는 사람도 없었음. 따라서 상대방에게 진다는 것이 국가위신의 실추로 이어질 이유가 없었고, 양국은 실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경기를 진행할 수 있었음. 이 평풍외교는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방문으로 귀결되었고, 미·중 화해무드의 절정을 장식했음.

- 이상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스포츠는 외형상 비정치적이며 대중문화라는 형태를 띠고 있는 까닭에, 스포츠를 통한 외교적 접촉이나 거부 표시의 행사는 당사국들을 정치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편리한 외교수단이 됨.
- 현실적으로 스포츠는 일정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 오늘날 국제적 스포츠 행사는 과거 파시스트 정권들처럼 정치적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거나 냉전시절처럼 이데올로기적 경쟁의 장으로 활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내재된 외교적 상징성은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으며 활용되고 있음.

## 4. 한국 스포츠 외교의 현황

### 가. 한국 스포츠 외교 조직

- 한국의 경우 스포츠 외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문은 관료(정부)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 스포츠와 관련된 정부부처로서 제1공화국 시절에 처음으로 문교부가 창설(이학래 외 1994, 195-197)된 이후 박정희 정부 시대에는 문교부의 체육담당국에 머물렀음. 전두환 정부 등장과 더불어 중앙정부의 독립된 부처로서 체육부가 신설되어 스포츠 관련 업무를 담당함. 체육부는 노태우 정부 시기 스포츠 업무와 청소년 업무를 통합하여 체육청소년부로 개편됨. 2010년 현재, 정부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산하에 체육정책과, 체육진흥과, 국제체육과, 장애인문화체육과의 1국 4과 5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이 중 국제체육과가 주무부서로서 국제체육교류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 및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 국제체육교류협정 체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남북한 체육교류 및 협

*국제적 스포츠 행사는  
과거 파시스트  
정권들처럼 정치적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거나  
냉전시절처럼  
이데올로기적 경쟁의  
장으로 활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내재된 외교적 상징성은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으며  
활용되고 있음*

**한국의 경우 스포츠  
외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문은 관료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력에 관한 사항, 국제스포츠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 선수의 금지약물 투여 방지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그 시행의 지원에 관한 사항, 태권도 등 전통스포츠의 세계보급에 관한 사항, 국제스포츠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국내 체육단체의 국제 스포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태권도 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태권도진흥재단 및 국기원에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0, 60-62).

- 현재의 상황은 1982년 체육부 설립 당시 2개과(국제경기과, 해외협력담당과)에서 스포츠 외교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에 비하면 매우 위축된 것임(문화체육관광부 2009, 472).
- 민간부문에서는 체육단체[대한체육회(Korean Olympic Committee: KOC), 각 경기단체 등]와 임시조직으로서 주요 국제대회 조직위원회가 있음. 국제업무는 KOC 국제교류팀과 국제경기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생활 체육팀도 국제생활체육 교류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음.
- 각 경기단체에서는 이사회에서 국제체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사무국 내에서 외교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와 국제이사의 책임하에 사무국에서 행정지원을 수행하는 형태가 있음. 그러나 후자의 경우 원활하고 지속적이며 전문적인 체육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조직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사업협력부 국제협력팀에서 생활체육 국제교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09, 475).

#### **나. 한국 스포츠 외교 인력 강화방안**

- 대한체육회의 경우 2009년 대한올림픽위원회와 완전통합, NOC 중심 체제로 개편하여 많은 국제경기 업무와 다양한 스포츠 국제기구 관련 업무 등 스포츠 외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대회조직위원회는 위원장, 사무총장, 그리고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스포츠 외교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그러나 각 경기단체의 경우 대부분 스포츠 외교 담당 상근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문화체육관광부 2009, 475).
- 이러한 약점 극복을 위해 정부는 체육외교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입

안하고 추진하였음. 체육 전문인력 양성은 제1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1993~1997)에서 입안되어 추진되었음.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체육지도자, 선수, 국제심판, 공무원, 경기단체 대한체육회에서 추천한 자 등을 대상으로 KOC가 주관하여 근무시간 후 6개월 또는 어학연수기관의 교육이수를 통해 체육외교 전문인력을 매년 10~100명씩 양성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근무시간 후 교육에 따른 교육시간의 부족, 집중교육의 어려움, 그리고 외국어 연수교육의 한계, 예산 부족 등으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음. 또한 단기 어학교육과 소양교육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외교실무, 정치외교관계론, 체육학 관련 분야(스포츠 외교론, 스포츠 마케팅, 체육행정 등)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지 않았음(문화체육관광부 2009, 477). 결국 참여정부 5개년 계획(2003~2007)에서 체육외교에 관한 전문교육을 교육·양성 분야에서 권위와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임하기로 결정되어, 국제경쟁력을 갖춘 전문 요원 양성을 위해 1~5년의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참여정부의 스포츠 외교 인력 강화 방안 역시 현실적인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참여정부는 ‘스포츠 외교력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전이경 등을 미국 대학 및 올림픽 위원회 등에 파견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어학연수과정과 해외유학 등을 지원하였으나, 정부의 지원이 주로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가 존재할 것임.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이 과연 ‘스포츠 외교력 강화방안’이 목표하고 있는 바와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적인 평가를 기약할 수밖에 없음.
- 정부부문 조직은 스포츠 외교에 관한 정책입안과 지원 분야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스포츠 외교 담당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적 근무가 필수적임. 그러나 정부 내 업무의 순환근무 등으로 스포츠 외교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행정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관내 스포츠 행사에 대한 지원적 성격의 행정업무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국제적 차원의 외교전문행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음.

**정부부문 조직은 스포츠 외교에 관한 정책입안과 지원 분야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스포츠 외교 담당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장기적 근무가 필수적임. 그러나 정부 내 업무의 순환근무 등으로 스포츠 외교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행정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국제체육기구의  
주요직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스포츠  
외교에 있어 영향력  
확대는 물론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국가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고 한국 스포츠  
외교는 국가외교의  
전체적 정향성과  
부합되는 방향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대한민국 외교가  
제시하고 있는  
공공외교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 국제체육기구 임원 진출

- 국제체육기구의 주요직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스포츠 외교에 있어 영향력 확대는 물론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국가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음. 특히 IOC위원, 산하분과위원회 위원장 혹은 위원이 되는 것은 IOC에서 한 국가의 스포츠 위상은 물론 정치적·경제적 위상을 반영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함. 또한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의 회장단과 집행위원 또는 이사로 진출하는 것은 해당 종목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경기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음.
- 한국은 현재 114명의 IOC 위원 중 2명을 보유하고 있음.
  - 이건희 1996년 7월 올림픽공식후원사 회장으로 피선.
  - 문대성 2008년 8월 임기 8년의 IOC 선수위원으로 피선.
- 유럽이 26개국 47명, 미주가 13개국 20명, 오세아니아주가 3개국 5명, 아프리카가 17개국 18명, 아시아가 21개국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3명 이상이 위원으로 있는 국가는 5개국이며, 최다 IOC 위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스위스로 5명의 IOC 위원이 있음.

#### 5. 한국 스포츠 외교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 상기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 스포츠 외교는 많이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중적 투자를 통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확보가 시급함.
-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국의 스포츠 외교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음. 한국 스포츠 외교는 국가외교의 전체적 정향성과 부합되는 방향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대한민국 외교가 제시하고 있는 공공외교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가. 한국 스포츠 외교와 공공외교의 수렴

- 한국 스포츠 외교와 공공외교는 현재 각각의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어떤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이는 무엇보다도 공공외교와 스포츠 외교의 추진이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기관들로 나뉘어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통합된 공공외교 전담부서가 없는 것에 기인한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현재 한국의 대표적 공공외교기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 KF)과 한국국제협력단(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임.
  - KF: 1991년 설립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도모 및 국제적 우호친선 증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
  - KOICA: 1991년 설립됨.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 및 국제협력을 주 업무로 하고 있음.
- 글로벌(the global)과 지역(the local)이 서로 분리된 용기(containers)가 아니고 상호 구성적인 사회과정(mutually constitutive social processes)이라는 인식(Tomlinson 1999, 182)이 시사하듯, 스포츠 외교와 공공외교는 글로벌과 지역의 상호 구성에 있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상호 수렴의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한류의 확산에 따른 ‘한국적인 것’에 대한 세계인들의 호감도 상승은 한국 외교에 매우 강한 호재로 작용하고 있음. 한국적인 것에 대한 호감과 공공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국가 한국’이라는 이미지의 확산시도가 스포츠가 갖는 긍정적 이미지와 결합된다면, 국격과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라는 목표 달성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한국 스포츠 외교와 공공외교는 현재 각각의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어떤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이는 공공외교와 스포츠 외교의 추진이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기관들로 나뉘어서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통합된 공공외교 전담부서가 없는 것에 기인함*

### 나. 공공외교 + 스포츠 외교 = 태권도?

- 지금까지의 한국외교에 있어 스포츠 외교와 공공외교의 양 측면을 동시에 가장 훌륭하게 충족시켜 온 것은 태권도였음. 태권도는 국제 무대에서 가장 많은 호응을 받는 한국의 문화·스포츠·외교 상품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리와 이를 통한  
국가이미지 고양은  
일회적이고 일방적인  
성격을 지님.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상호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중 하나임.

- 정부의 태권도사범 해외파견 업무는 지난 1972년부터 외교통상부와 국정원이 제각기 진행해 왔으나 업무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1991년 4월 KOICA 설립 후 전문가(태권도, 의사 등)의 해외봉사단 파견 등 대외무상협력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음. 이와 같이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벌여오고 있는 태권도사범 해외파견과 태권도 시범단 파견은 태권도의 보급과 확산은 물론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각국과의 우호 친선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됨.
- 태권도만으로는 부족함. 그렇다고 해서 태권도 이외의 다른 스포츠 종목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님.
- 국가 주도로 스포츠 엘리트 시스템으로 한국스포츠가 많은 성과를 거두어 온 것은 사실임.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온 축구, 양궁, 쇼트트랙, 탁구 등의 종목 등은 물론 근래에 들어서는 야구와 피겨스케이팅, 수영, 체조 등 국제무대에서 상대적으로 약세에 있던 종목의 선수들이 활약함으로써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음.
- 이와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의 승리와 이를 통한 국가이미지 고양은 일회적이고 일방적인 성격을 지님.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상호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다. 평창의 드림 프로그램**

- 글로벌과 지역의 상호구성, 스포츠 외교와 공공외교의 수렴가능성, 상호성과 지속성의 결합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로 평창의 드림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음.
- 드림 프로그램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주요 전략 중 하나로 겨울 스포츠가 발달하지 못한 국가의 청소년을 초청해 동계스포츠 꿈나무로 키운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음. 평창은 2010 동계올림픽 유치 운동 당시 드림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유치가 실패한 뒤에도 이 프로그램을 지속해왔으며, 이는 금번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는 평가임.

- 드림 프로그램은 2004년 1회부터 2008년 5회까지 39개국 578명이 참가했고 2009년에는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유럽 등 29개국 116명의 청소년과 지도자가 참가했음.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꿈나무들’은 각국의 꿈을 이루는 데 보탬이 되었음. 인도의 ‘만갈스탄진’, 몰도바의 ‘브라이 일리에’ 등 5개국 9명의 꿈나무는 자국 주니어 대표 또는 국가대표로 선발돼 쇼트트랙 월드컵,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2008 4대륙 선수권 피겨 선수 등으로 출전했음.
- 공공외교란 ‘자국의 국가적 목표와 정책뿐 아니라 사상과 이상, 제도 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타국의 대중과 의사소통하는 과정’이라는 투흐(Tuch 1990)의 정의에 비추어 봤을 때, 평창의 드림 프로그램은 매우 훌륭한 본보기로서 작동한다고 할 수 있음. 스포츠 활동을 통한 호의적이고 선진적인 국가이미지의 형성,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한국 이미지 형성, 일회적 원 조가 아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원조와 이를 통한 지한파 인사의 형성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음.

**라. 정책적 제언**

- 평창의 드림 프로그램과 같은 성공적인 작품이 더욱 다양하게 개발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간주됨.
  - 스포츠 외교 전문기구가 설립되어야 함.
    - 한국 공공외교의 대표기관인 KOICA와 KF는 외무부 산하에 속해 있지만, 독립된 재원을 갖는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일관된 방향으로 독립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음.
    - 스포츠 외교에 있어서도 KOICA와 KF와 같은 성격을 갖는 독립적 전문기구의 수립이 요청됨. 그리고 그 소속을 문화체육관광부 로 하는 것보다는 스포츠 외교를 전담한다는 의미에서 외교통상 부 산하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 제안하자면 ‘한국 스포츠 교류 재단(Korea Sports Foundation: KSF)’ 과 같은 명칭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임.
    - 국제경기에 관한 사항은 현재의 조직을 유지시키고 국제교류에 관한 항목은 전적으로 새로운 독립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공공외교 분야와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글로벌과 지역의 상호구성, 스포츠 외교와 공공외교의 수렴가능성, 상호성과 지속성의 결합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로 평창의 드림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음*

**오늘날의 세계에서  
외교는 위계적인  
국가중심의 국제관계  
모형에서보다 네트워크  
환경에서 더 효율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음.  
그러나 외교의 영역이  
아무리 다양화 하고  
비정부 행위자들의 힘과  
영향력이 확대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국가행위자들임.  
따라서 스포츠 외교와  
공공외교에 있어  
국가행위자에 의한  
주도적 조정은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고 판단됨**

-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 스포츠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단일화 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정부부문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제체육과가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은 KOC와 각 경기단체,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임시조직으로서 주요 국제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요 행위자들임.
    - 이와 같은 행위자의 분산은 효과적인 정책의 조율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재원의 집중적 투자와 사용을 불가능하게 함. 갈수록 커져가는 스포츠 시장과 공공외교적 성격을 감안한다면 정부부문의 창구확대와 민간부문의 통폐합을 통한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함.
  - 지역 차원에서 추진되는 메가 스포츠 이벤트 유치 운동에 반드시 정부차원의 조정이 존재해야 함. 이는 전술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항목이 실현된다면 저절로 해결될 것임.
- 사실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음. 공공외교가 국가행위를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공공외교 또는 외교행위 전반을 국가행위만으로 규정하기는 힘들다는 입장 또한 존재함.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크고 작은 비국가 행위자들과 초국가적(supranational) 혹은 국가 내부(subnational)의 행위자들도 그들 자신의 공공외교 정책들을 개발하고 있음(Olins 1999).
- 세계시장에서 활동하는 국제적 기업들도 자신들의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자각하고, 자신들의 공공외교 정책을 가다듬기도 하고,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추고 공공외교의 최선봉에 서기도 함. 즉 오늘날의 세계에서 외교는 위계적인 국가중심의 국제관계 모형에서보다 네트워크 환경에서 더 효율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확실해지고 있음. 그러나 외교의 영역이 아무리 다양화 하고 비정부 행위자들의 힘과 영향력이 확대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국가행위자들임. 국가가 어떠한 모습으로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국가에 속한 많은 기업들과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마련임. 따라서 스포츠 외교와 공공외교에 있어 국가행위자에 의한 주도적 조정은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고 판단됨.

## 6. 나가는 말

- 결론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국 스포츠 외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진선 동계올림픽 유치 특임대사를 추대하였음. 평창조직위는 10월 19일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임.
- 올림픽 조직위는 한시적인 조직이지만, 이 기회를 통해 평창조직위의 활동 후 모습을 미리 상정할 필요가 있음. 상기 제안한 가칭 KSF의 밑그림을 평창 동계올림픽 준비과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노력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함은 물론, 한국 스포츠 외교의 향후 발전을 위한 훌륭한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임.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총체적 노력이 필요함.

**기획 및 감수:**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오은정 (제주평화연구원 인턴)

## 저자 약력

---

### ■ 정기웅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음. PRIO (Peace Research Institute Oslo) Guest Researcher. 연구 관심분야는 국제협력/협상, 스포츠 정치/외교, 공공외교/ODA, 남북관계 등임.

주석

- 1) 현대경제연구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가 64조 9,000억원(직접적 효과 21조 1,000억원, 간접적 효과 43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현대경제연구원(2011), 2-3.
- 2) 아시아에서 개최된 세 번의 올림픽 경기들에 대한 비교평가는 Paul Close, David Askew & Xu Xin, “The Olympic Gaems as a 'coming out party': Tokyo, Seoul, Beijing and the Asian Olympic discourse,” Paul Close, David Askew & Xu Xin, *The Beijing Olympiad* (New York: Routledge, 2007), pp.121-144를 참조할 것.
- 3) 아시아에서 개최된 올림픽 경기들의 성공과 관련한 논의는 Holger Preuss, *The Economics of Staging the Olympics* (Northhampton, Massachusetts: Edward Elgar Publishing, Inc., 2004), pp.12-27; Holger Preuss, “The Olympic Games: Winners and Losers,” Barrie Houlihan, ed., *Sport and Society* (London: Sage, 2008), pp.415-438; Victor D. Cha, *Beyond the Final Score: The Politics of Sport in As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9), pp.22-29 등을 참조할 것.
- 4) 서울 올림픽의 의의 및 성공과 관련한 논의는 Jarol B. Manheim, “Rites of Passage: The 1988 Seoul Olympics as Public Diplomacy,”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43, No. 2 (1990); Vladslav Zubok, “The End of the Cold War in Europe: Lessons for Korea?” Chung-in Moon, Odd Arne Westad, Gyoo-hyoung Kahng, eds., *Ending the Cold War in Korea*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2001); 강규형, “한국과 냉전: 제2냉전 성립기의 KAL기 격추사건과 그 종식기의 서울올림픽이 냉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6권 2호 (2003); 정기웅, “전두환 정부의 외교정책과 1988년 서울 올림픽,” 『한국 외교정책: 역사와 쟁점』(서울: 사회평론, 2010) 등을 참조할 것.
- 5) 이하 분석시각에 대해서는 정기웅(2008), 266-270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힘.
- 6) 3장의 내용은 정기웅(2009)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힘.
- 7) 이외에도 스트렝(Andrew Strenk)은 스포츠가 국제정치에서 활용되는 유형으로 외교적 승인 또는 승인거부의 수단, 정치이념의 전파수단, 국가위상의 제고수단, 국제적 이해와 평화증진의 수단, 저항수단, 그리고 무기 없는 전쟁수단의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음. Strenk(1977), 3-10.

참고문헌

- Allison, Lincoln. ed. 2005. *The Global Politics of Sport: The Role of Global Institutions in Sport*. London: Routledge.
- Bairner, Alan. 2005. "Sport and the nation in the global era," in Lincoln Allison ed., *The Global Politics of Sport: The Role of Global Institutions in Sport*. London: Routledge.
- Cha, Victor D. 2009. *Beyond the Final Score: The Politics of Sport in As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Close, Paul, David Askew & Xu Xin. 2007. "The Olympic Gaems as a 'coming out party': Tokyo, Seoul, Beijing and the Asian Olympic discourse." Paul Close, David Askew & Xu Xin. *The Beijing Olympiad*. New York: Routledge.
- Coakley, Jay. 2002. "사회이론은 스포츠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줄 수 있는가?" 안민석 · 정홍익 · 임현진 편저. 『새로운 스포츠사회학』. 서울: 백산서당.
- Galtung, Johan. 1991. "The Sport System as a Metaphor for the World System." F. Lindry, M. Lindry and M. Yerles eds. *Sport: The Third Millenium*. Quebec: University of Laval Press.
- Houlihan, Barrie. 2007. "Politics and Sport," Jay Coakley & Eric Dunning (eds.), *Handbook of Sports Studies*. London: Sage.
- Manheim, Jarol B. 1990. "Rites of Passage: The 1988 Seoul Olympics as Public Diplomacy." *The Western Political Quarterly*, Vol. 43, No. 2.
- Olins, Wally. 1999. *Trading Identities: Why Countries and Companies are Taking on Each Others' Roles*. London: Foreign Policy Centre.
- Preuss, Holger. 2004. *The Economics of Staging the Olympics*. Northhampton, Massachusetts: Edward Elgar Publishing, Inc.
- Preuss, Holger. 2008. "The Olympic Games: Winners and Losers." Barrie Houlihan. ed. *Sport and Society*. London: Sage.
- Strenk, Andrew. 1977. "Sport As an International Political and Diplomatic Tool," *Arena Newsletter*, 1.
- Tomlinson, John. 1999. *Globalization and Culture*. Cabmridge: Polity.
- Tuch, Hans N. 1990. *Communicating with the World: U.S. Public Diplomacy Overseas*. New York: St. Martin's Press.
- Zubok, Vladslav. 2001. "The End of the Cold War in Europe: Lessons for Korea?" Chung-in Moon, Odd Arne Westad, Gyoo-hyoung Kahng. eds. *Ending the Cold War in Korea*.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강규형. 2003. "한국과 냉전: 제2냉전 성립기의 KAL기 격추사건과 그 종식기의

- 서울올림픽이 냉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6권 2호.
- 김방출 · 권순용. 2007. “스포츠 민족주의 재인식: 전지구화, 스포츠, 기업 민족주의.” 『체육과학연구』 18집 1호.
- 문화체육관광부. 2009. 『체육백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0. 『체육백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양순창. 2003. “스포츠의 정치적 상징성과 상징조작 기제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43집 3호.
- 유호근. 2008. “한국스포츠외교정책: 분석틀의 모색.” 『글로벌정치연구』 제1권 1호.
- 이강우 · 김석기. 2006. “메가 스포츠 이벤트의 정치경제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4권 2호.
- 이학래 외. 1994. 『한국체육사』. 서울: 지식산업사.
- 임현진 · 윤상철. 2002. “월드컵의 국제정치경제,” 윤상철 · 안민석 편, 『월드컵, 신화와 현실』 서울: 한올아카데미.
- 정기용. 2008. “스포츠를 통한 국가위신의 고양.” 『글로벌정치연구』 제1권 1호.
- 정기용. 2009. “스포츠와 공공외교 수렴 가능성의 모색: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1권 2호.
- 정기용. 2010. “전두환 정부의 외교정책과 1988년 서울 올림픽.” 함택영 · 남궁곤 편. 『한국 외교정책: 역사와 쟁점』. 서울: 사회평론.
- 정준영. 2003. 『열광하는 스포츠 은폐된 이데올로기』. 서울: 책세상.
- 정희준. 2008. “스포츠메가이벤트와 경제효과: 그 진실과 허구의 재구성.”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1권 1호.
- 조문기. 2007.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슬로건(“One World One Dream”)의 중화민족주의적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체육학회지』 제31호.
- 현대경제연구원. 2011. 『현안과 과제』 11-17.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 JPI 정책포럼 현황

- 김동성 『동아시아 전략적 3국 관계와 한국외교의 대응방향』 (2011년 9월)
- 우준모 『다시 열리는 푸틴의 시대: 러시아 정치 전망』 (2011년 8월)
- 고선규 『일본의 민주당 정치와 한일관계』 (2011년 8월)
- 정지웅 『북한의 변화와 남북통일전망』 (2011년 8월)
- 조태열 『한국의 ODA 정책과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 (2011년 7월)
- 홍현익 『중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극동정책』 (2011년 7월)
- 진행남 『신한류와 동아시아 문화 네트워크』 (2011년 7월)
- 양창석 『독일 통일 교훈과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 (2011년 6월)
- 박동훈 『경제위기 이후 중·미관계 변화와 한반도』 (2011년 6월)
- 임수호 『북·중경협 현황과 전망』 (2011년 6월)
- 이기현 『중국의 대북정책과 북·중동맹의 동학』 (2011년 5월)
- 박상현 『에너지 안보의 동학과 일본 원자사태』 (2011년 5월)
- 김종선 『원자력 사고의 국제 대응체제의 강화 필요성: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2011년 5월)
- 이면우 『대지진 이후의 일본 위상과 동북아질서』 (2011년 4월)
- 김병로 『한반도 통일: 비전과 전략』 (2011년 4월)
- 김동성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과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 (2011년 4월)
- 김중섭 『미중관계의 정상화와 대만』 (2011년 3월)
- 고성준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의 개발: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2011년 3월)
- 이홍섭 『러·중 군사협력의 동향과 장래』 (2011년 3월)
- 김두진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거대기업의 역할: EU사례의 함의와 적용』 (2011년 2월)
- 염돈재 『독일통일의 쟁점과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2011년 2월)

- 정영태 『서해해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방안』 (2011년 2월)
- 김태환 『21세기 신공공외교와 포럼외교』 (2011년 1월)
- 안찬일 『북한의 다각적 평화공세와 체제전환 가능성』 (2011년 1월)
- 황지환 『남북관계의 국제정치』 (2011년 1월)
- 성원용 『러시아 극동지역의 전력공급체제와 남-북-러 전력계통 연계』 (2010년 12월)
- 고상두 『동북아 다자협력체 구축조건: 통일독일의 경험이 주는 함의』 (2010년 12월)
- 김갑식 『북한 당대표자회와 김정은 후계체제 전망』 (2010년 12월)
- 박흥영 『전후 일본 ODA 정책의 변화상: 한국에 주는 함의』 (2010년 11월)
- 최희식 『중일 첨각열도 해양영토분쟁: 평화적 관리 방식의 전환기?』 (2010년 11월)
- 김미경 『일본의 반핵평화주의와 안보현실』 (2010년 11월)
- 김수암 『탈북자의 현황 및 인권』 (2010년 10월)
- 원동욱 『중국 대외원조의 현황과 추세: ‘불량국가’ 지원과 그 시사점』 (2010년 10월)
- 손기웅 『독일통일 20주년에 비춰본 한반도통일의 과제와 전망』 (2010년 9월)
- 이선진 『중국의 대미안마 전략』 (2010년 9월)
- 최경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변화 전망』 (2010년 9월)
- 전진호 『일본의 한국병합 100년 한일관계의 과제와 전망: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갈등의 해결방안과 협력의 전망』 (2010년 8월)
- 정성장 『북한의 파워 엘리트 변동: 동향과 전망』 (2010년 8월)
- 최명해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와 지속』 (2010년 8월)
- 김재철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2010년 7월)
- 이성우 『두만강 개발과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전망: 동아시아 다자협력체의 건설을 중심으로』 (2010년 7월)

- 이애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사회정착 현황과 조기정착 방안』 (2010년 7월)
- 안병민 『남북해운합의서상 통항 통제조치의 효과 및 전망』 (2010년 6월)
- 서상문 『한국전쟁의 국제정치적 의의와 현재적 함의』 (2010년 6월)
- 손병권 『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미중관계의 전개양상과 전망』 (2010년 6월)
- 권태진 『북한의 식량위기: 배경 및 전망』 (2010년 5월)
- 오경택 『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평가 및 전망』 (2010년 5월)
- 김기석 『신 공동체 구상과 신아시아 외교』 (2010년 5월)
- 전성훈 『핵비확산 체제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함의』 (2010년 4월)
- 김석수 『해적과 해양안보: 소말리아 해적 문제를 중심으로』 (2010년 4월)
- 유달승 『이란의 권력구도와 정치운동 및 핵 문제』 (2010년 4월)



#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Community Building in East Asia*



[www.jejuforum.or.kr](http://www.jejuforum.or.kr)

##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제주평화연구원 (697-120)  
Tel. 064-735-6532 또는 533 email. jejuforum@jpi.or.kr  
homepage. www.jejuforum.or.kr

### 제주평화연구원은

2011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에서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을 주관하였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New Asia for Peace and Prosperity)' 라는 대주제 아래 평화와 안보, 경제, 경영, 환경, 문화, 여성, 의료, 도시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새로운 국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아시아 지역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김황식 국무총리, 아로요 필리핀 전대통령, 자오치청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위원장 등 국내외 고위인사 등이 참석하여 새로운 아시아 지역협력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었고, 64개 세션에 세계 22개국에서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포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중국 중견기업인 100여명을 포함, 국내외저명인사 1,8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규모면에서도 가장 큰 회의로서 종합국제포럼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성대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 개최식에서 공식화된 바와 같이 이제 제주포럼은 격년제 개최에서 매년 개최하기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포럼 기획단을 발족하여 2012년 5월-6월 중 제7회 제주포럼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앞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이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대의 종합국제포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7회 제주포럼 부터는 포럼의 의제와 목적에 동의하는 국내외 기관과 단체가 세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세션을 대폭 개방할 예정입니다. **제7회 제주포럼에 대해 귀기관과 귀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제주포럼에 대해서는 포럼 공식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럼 참가문의는 제주포럼 기획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mailto: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